

광주 5개 에너지 전환마을, 시민 주도 탄소중립 이끈다

市, 시범마을 5곳 개소 마을중심 시민행동 주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등 활동

다섯 개의 에너지 전환마을이 광주시 목표인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마을 주도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끌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 등이 나온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동구 지원, 서구 풍암, 남구 양림, 북구 일곡, 광산구 첨단 등 5개 자치구별로 에너지 전환 시범 마을을 선정했다. 각 마을

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상담, 교육, 태양광 발전, 자원 순환, 채식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는 거점센터가 활동에 들어갔다.

1호점인 첨단동 전환마을 에너지카페는 주변에 소규모 거점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매주 토요일 '기후위기 토요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해 '반짝반짝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햇빛발전소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 동구 지원동 마을 에너지전환센터는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를 중심으로 골목길 주택들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 기록단 리빙랩'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무등에

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중심으로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등도 계획 중이다.

북구 일곡동 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는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내 녹지공원에 등지를 틀고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센터가 자리한 공원 내에 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전환 마중물 배움터'와 '태양광 에너지로 노을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남구 양림동 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는 에너지 절약에 특화된 자원순환-에너지 전환교육을 비롯한 '제로웨이스트샵' 등을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림동이라는 관광 명

소의 특성에 맞춰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견학처로도 활용하고 있다.

서구 풍암동 마을 에너지거점센터에선 지역자원을 조사·연구하고 마을별 특색에 맞는 에너지전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풍암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에너지전환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5kW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했으며, 각종 에너지 교육들도 구비해 주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에너지전환 강사단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전문 활동가 양성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광주시는 이들 시범 마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5곳의 에너지 전환 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박필순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대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환 마을 사례는 하나의 답을 주는 것 같다"며 "광주의 탄소중립 시민참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시민 활동가들의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준비하는 과정과 에너지 전환 활동을 보면서 시민과 함께하면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에너지전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과 실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맨 오른쪽) 전남지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대표와 면담을 갖고 2022년 전남에 꼭 필요한 국고예산 사업 10건과 정책현안 5건의 대해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 내년 국고예산 확보 강행군 박병석 국회의장 등 당 지도부·국토부 장관 만나 지원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년 전남에 꼭 필요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에 나섰다.

전남도는 7일 "김 지사가 지난 5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민주당대표, 이종배 예결위원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전남도에 꼭 필요한 국고예산사업 10건과 정책현안 5건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의 주요 국고사업인 ▲신안 비금~암태 국도 2호선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설립(중액)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김지 원료공급단지 지원(중액)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중액)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 구축 ▲국립남도 음식진흥원

건립 ▲여수사건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국비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후속 조치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면담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남의 SOC 사업계획이 많이 반영돼 진심으로 감

사하다"며 "신안 비금~암태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철도 건설(중액),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에타면제) 등도 시급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 예결위 간사와 만나 "국고예산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의장 등 면담 의원들은 "전남의 현안과 국고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 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고 건의사업에 관심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노형욱 장관도 "전남에서 건의한 국고 지원사업과 정책 현안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는 12월 2일 내내 국가예산 확정일 확정될 때까지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실·국장들이 국회의와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청신호

133개 안전프로그램 좋은 평가 1차 평가...내년 상반기 재공인

국제안전 도시 재공인에 나선 광주시의 도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조건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행 여부 등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광주시는 그동안 127개 기관·부서·단체를 중심으로 133개에 이르는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시청 층무 시설에서 안전 도시 공인에 필요한 1차 현지 실사 평가를 했다. 손상 감시체계, 자살·낙상·폭력 예방, 교통안전 등 분야별 발표와 지역 사회 시민 안전 우수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현지실사와 화상회의를 동시 실시해 국내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도시 관계자들도 함께 참관할 수 있게 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SC)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광주시는 1차 평가내용을 보완한 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SC)에 공인신청서(영문)를 제출하며, 내년 상반기 중 재공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4월28일 국내 11번째, 세계 365번째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다양한 안전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127개 기관·부서·단체 합동으로 손상 사망률 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재해·재난, 폭력예방, 자살예방, 학교안전, 노인낙상, 도로교통사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부터 122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증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심사 기준인 2019년 말 기준, 광주시 총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는 9.1%로, 2010년 대비 4.2%, 2015년 대비 0.7% 감소했다.

/박필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수산물 가공 등 8개 기업 유치

전남도가 7일 목포, 순천, 영암 등 3개 시·군과 협력해 각 지역산업과 연계한 8개 기업과 270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목포, 순천, 영암에 10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목포 대양산단에 6개 기업이 168억원을 투자한다. 평화식품이 30억원을 들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갖춘 새우젓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태창수산물과 목포영어조합법인인 각각 35억원, 20억원을 투입해 목포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건조하는 가공공장을 신축한다.

(우)신한이엔지는 32억원을 투자해 PVC창호

및 판넬도어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에이치디산업건립은 26억원을 들여 건축물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제조 공장을, 대성공업(주)은 25억원을 투입해 펌프 및 펌프 설치 구조물 제작공장을 구축하게 된다. 영암특화농공단지에는 ㈜미로가 20억원을 들여 떡 제조공장을 신설해 독자적 떡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순천 홀콘산단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휠체어를 생산 중인 ㈜마이벨로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을 위해 시설 증설에 82억원을 투자한다. 유림·북미지역 수출 및 국내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정성
숙한 정치문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듭니다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